

대학 개혁을 기대하며

김 근 한겨레 논설주간

대학을 밖에서 보는 일이 객관적 작업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은 그것을 문외한이 말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쉽지 않다. 다만 대학이 사회에 어떻게 비추이는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말할 점은 있을 것이다. 매우 일반적이고 그런 점에서 진부할 수도 있는 현상들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교육부 주도로 대학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부터 교수임용제도, 대학구조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개혁논의가 진행중이다. 논의가 발전하면서 시비가 일고 심지어는 강한 비판과 항의도 잇따른다. 개혁논의의 잘잘못을 가리자면 깊은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는 일은 어렵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여러 분야에 개혁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리라는 점이다. 우리의 대학이 이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구실을 원만히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혁이 성공하여 대학이 궁극적으로는 학문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치혼란을 정리할 도덕적·실질적 지도능력을 잃었다는 데 있다. 그렇다 해서 그 능력을 되찾기 위해 추상적인 논의에만 머물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야 바라는 바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최근에 벌어지는 대학개혁 논의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

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는 사학의 비리,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도는 교수임용 과정, 민주적 제도인 총장직선이 비민주적 결과를 빚어내는 역리적 현상 등, 적어도 대학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회 전반의 고질적 문제들이 대학 사회에 투영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대학이라 해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유리되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리라. 그렇다 해서 대학이 두 손놓고 있어서야 그것은 대학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오히려 사회의 비리와 역리적 현상을 반성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대학사회의 의무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은 한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옹호하여 유지시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최근에 교수임용제도의 개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이번에도 시도하는 것은 기왕에 있었던 재임용제도와는 달리 교수사회 안에 강력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시도를 대학에 무작정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반발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 경

쟁으로 우열을 가리는 일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을 채쳐두고라도, 우열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도 실은 간단치 않다. 그렇다 하여 논문의 편수로만 학문의 성실성과 업적을 평가하는 것도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수임용제도가 바뀌지 않고는 대학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듯하다. 한번 임용이 된 뒤로는 65세 정년 때까지 누구나 무난하게 현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교수직이다. 수년 전부터 평가제, 연봉제, 정년제 조정 등의 논의를 일부에서 제기했으나, 그것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해 현실화할 가능성은 멀어 보였다. 물론 교수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승진할 때나 재임용할 때 업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것들이 모두 유명무실할 뿐이다. 교수로 임용될 때 대체로 지연과 학연이 크게 작용한 뒤로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정년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되지 못한다.

대학 구조 개혁도 진행중이지만 그것은 더욱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불합리한 교수임용제도는 교육부가 낸 개혁안을 보완한다는 전제 아래 이번 기회에 크게 바꾸어야 하리라고 본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대학 안에서 일차원적인 연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서라도 그것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부로 경쟁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지연과 학연으로 대학사회가 좌지우

지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대학에서 총장선거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현상을 살피면, 우리 대학사회가 얼마나 연고주의에 의해 좌우되는가를 알 수 있다. 대학총장 선거에 출신 고등학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우리 나라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총장 직선제를 얻어낸 어느 국립대학의 경우, 뜻있는 교수들이 직선제의 부작용에 절망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하느라 머리를 맞대며 동분서주하는 모양을 지켜 본 일이 있다. 총장 직선제 때문에 학교 안에 편이 갈리고 불화가 생긴다면, 그러한 대학이 어떻게 사회를 지도할 소임을 맡을 수 있겠는가.

개혁은 대체로 거칠고 정치하지 못한 구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다면적인 검토를 거쳐 개혁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현실이 당위적 기준을 한참 벗어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개혁방안은 너무 관념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저항도 거세다. 우리의 대학사회에는 지금 절실하게 개혁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김근**

김 근

한국외국어대 서반어과를 졸업하였다. 동아일보 기자,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한겨레 논설주간으로 재직중이다.